

## 신자유주의, 그 이후: 로봇과 실업

임수환\*

자동차 조립공장 생산라인에 가 보면 노동자는 거의 보이지 않고 로봇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동차 노조문제를 보도할 때 비취주는 내장재 장착라인에서만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나의 선을 이루며 일관작업을 하는 것이 보일 뿐 다른 라인에서는 가끔 등장하는 노동자들이 점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 설비구매에 사용되고 고용효과는 내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이 공장자동화와 로봇의 사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노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동기에서 로봇으로 노동자들을 대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산업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대기업 노조는 생산라인을 마비시키겠다는 협박을 앞세우고 임금인상을 관철시키고 기업은 인력채용을 기피하는 동안, 학교를 졸업하는 젊은이들은 취직하지 못해서 부모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 부모들은 또 다시 가족부양의 짐 때문에 직장사수를 위한 노조투쟁에 나서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일부는 계속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나머지는 실업상태에서 가장에게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굳어져 가고 있다. 일부는

---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4대보험 가입자로서 사회복지제도의 주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양가족으로서 사회복지제도에 편승하거나,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국가예산으로 부양받으며,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 밖에 머물게 된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소득을 축적하여 재산과 연금을 형성하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므로 시간이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된다. 일반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은 계급분화를 낳고 계급정치를 불러들이는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노동자들이 노조와 노동당을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임금상승 압력을 가하거나, 투표권과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등을 요구하는 경로를 통하여 노동계급의 이익이 정치과정에 투입된다고 인식되어 온 것이다. 노동정치는 19세기 영국과 북유럽 소국들에서 투표권 확대를 통한 민주화 변혁을 일으켜 오늘날 선진정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를 낳는데 기여했다.

20세기 의회민주주의들은 1930년대 대공황을 맞아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내수기반을 늘려서 경제성장력을 유지시켰다. 미국의회는 1935년 사회보장법을 통과시켜서 공적연금제도와 실업보험체계를 도입하였다. 루즈벨트정부는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보장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와그너법을 제정하여 노조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였다. 뉴딜정책은 도시 노동자와 남부 농민들의 정치적 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을 확충해 주었다. 스웨덴,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사회당이 노동자-농민 연합을 구축하여 사회민주주의 개혁정책을 시행했다. 볼셰비키 혁명의 축이었던 노동연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으로 변신하였던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들은 뉴딜정책이나 사회민주주의 개혁정책을 통하여 노동자, 농민들의 실업을 막고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아냈다. 국가는 노동정치를 포용했고, 노동정치는 폭력혁명노선 대신 의회주의에 동참했다. 의회민주주의는 노동운동의 활성화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양자 모두

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민족국가를 단위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경제를 지배한 브레튼 우즈체제에서도 그대로 보전되었다. 브레튼 우즈체제 하에서 민족국가들은 환율과 외환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가진 채 가트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함으로써 전후 시장경제의 번영과 의회민주주의의 안정화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초반기에 있어 노동정치 양상은 이전 세기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와 함께 분출한 노동운동 활성화에 대응하여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공장자동화 투자를 늘렸다. 섬유, 봉제, 합판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으로 해외이전 투자를 했고, 국내에 남은 기업들은 이들 나라들에서 수입된 노동인력들을 사용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우리의 자본수출 및 인력수입 대상국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축적되는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도 진출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후발 개도국들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자동화로 임금지출을 억제하고 있다.

1960년대 한국의 고용증진에 기여했던 섬유, 봉제, 합판 등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이제 해외로 나가거나 인력수입을 통해서 후발 개도국들의 고용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970년대 국가주도적 중화학 투자 이후 성장한 자본집약적 산업들은 후발 개도국들의 도전과 국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라는 양대 도전에 대응하여 공장자동화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고용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고용창출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해법이 서비스 산업의 개발이다. 우리경제가 제조업 위주로 발달하여 유통, 통신, 보험, 금융, 의료, 교육, 주택,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직

업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직업의 다양화와 고용기회 확대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서비스 산업 개발을 위해서는 규제철폐, 자유화와 개방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산업정책을 추진하여 제조업 성장을 지원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관료주의적 규제 장치들이 축적되어 왔다. 관료주의적 규제장치들은 토지, 자본과 인력의 공급에 대한 인허가와 통제를 통하여 자원의 흐름을 제조업에 유리하게 틀지우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수많은 규제장애와 자본 및 인적자원 부족으로 시장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빠진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 개발을 통해 고용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서비스 산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화는 자유화를 위한 국제정치적 수단이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이미 1980년대 초에 규제철폐, 자유화에 앞장서고 자유화를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를 추진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7년간의 협상 끝에 1993년 말에 타결되어 1995년부터 세계 무역기구를 출범시켰고,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모두 가입하면서 문자 그대로 전세계의 동시 자유화를 이끌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어 수정자본주의라 불리던 시대흐름이 역전되어 정부가 시장개입으로부터 후퇴하는 이 경향은 신자유주의라 불리곤 한다. 역대 미국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철폐, 자유화와 개방화 정책 하에 미국경제는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제조업은 쇠퇴하고 서비스 산업이 미국을 대표하게 되었다. 월마트와 같은 유통기업들은 수입 생필품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이 미국의 대표적 수출품이 되었다. 무엇보다 미국 서비스 산업의 총아는 월가의 금융산업이었다. 미국의 금융기업들은 제조업 제품의 수입으로 해외로 유출된 달러를 국제자본의 형태로 재수입하여 미국인들이 소비생활 또는 ‘과소비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개발연대에 금융기관의 대출은 기업이 독차지하고 개인들은 가족 및 친지들과의 신용거래에 의존해 온 한국의 금융질서도 1997-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는 동안 IMF가 요구하는 자유화 조치에 따라 미국식 금융질서로 바뀌었다. 금융기관들이 기업보다는 가계대출에 더 열을 올리고, 개인들도 가족 보다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더 신경쓰게 되었다. 금융은 개인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개인들은 유교적 가족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로서 금융기업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국가는 그 후선에 머물러 있는 자유주의 질서가 도래한 것이다.

2008년 미국 월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이다. 금융기업들이 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할 능력과 도덕적 자질이 모자라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오바마 정부는 대형 금융기업들의 대실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방치하지 못하고 재정지원으로 금융기업들의 파산을 막아 주었다.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했고 그만큼 시장질서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다. 신자유주의는 금융기업들 스스로의 대실패로 인해서 권위를 잃고 환경규제 강화, 의료보험 개혁, 실업수당 지급연장 등의 형태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노무현 정부의 좌파적 정책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던 한나라당이 집권했다. 한나라당 정부가 2008년부터 한미FTA를 조기 실현시키기 위해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보건위생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무현 정부 하에서 축적되었던 규제를 철폐하고,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며 FTA정책을 통해 개방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미국 월가가 금융위기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질서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위기에 대응하여 주택과 교육 부문에서

서민정책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재정을 투입해 서민용 고급주택을 공급하고 장학금과 학자금 용자의 공급을 확대하고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구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선까지 수정할 것인가? 신자유주의적 서비스 산업 진흥책의 대안으로는 사회민주주의적 접근법도 있다. 북유럽에서는 자유주의적 접근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적 접근을 통해 고품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 유통, 관광, 문화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달하여 있다. 국가예산으로 교육, 의료, 주택, 평생교육 등을 책임지는 체제이므로 국가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시장과 일을 분담하는 접근법이다.

로봇이 인간의 일터를 대체하기 때문에 인간이 실업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가치역전의 현상이다. 로봇이 등장하기 전에는 인간이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가난해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인간 대신 로봇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왜 인간이 실업상태를 여가로 즐기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는가?

우리보다 저임금으로 제조업 생산에 뛰어든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과의 국제시장경쟁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도 순익을 별로 남기지 못하고 따라서 국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대규모 개도국들이 제조업에 뛰어들면서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므로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인들은 장시간 노동하여 획득한 외화를 원자재수입에 다 지출해 버려서 실질소득의 개선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G-20 의장국이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도 초청받은 모범적 개발국 국민이면서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다. 여유로운 생활이 없이 창의성을 개발하기 어렵고, 창의성이 모자라 지적재산권 수입국으로 남아 있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로봇이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지만, 자동화된 공장에서도 로봇을 관리하고 조작하는 엔지니어들과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들이 필요하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점점 고도화되어 가는 산업구조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문지식을 익히고도 대기업에 취직할 기회를 찾기 어려워하고 취업한 사람들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후발개도국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하는 일의 시장가치도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슬픈 처지가 보람된 상황으로 재인식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우리는 후발개도국들에게 자본을 수출하고 인력을 수입하여 그들의 실업문제를 해소해 주고 있다. 그렇게 형성되는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그들의 땅과 바다에서 자원개발사업을 벌인다. 우리는 후진국의 실업을 해소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천연자원 개발을 통해서 그들의 자본부족 문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 우리는 반세기 만에 우리의 가난을 해소한 다음 이웃 후진국들의 가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홍익인간의 역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학업경쟁과 취업경쟁에서 받는 고통, 그리고 우리 모두 장시간 노동과 휴식부족으로 겪는 고통을 해소하여 우리의 노동이 보람되고 자유롭고 여유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서비스 산업에서 세계일류 기업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해결해 주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 규제철폐와 자유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또는 시장경제적 원칙에만 매달려서 고도우가 올 때 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태도인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실업, 학벌주의, 빈부격차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태도일 것이다. 새로운 노동운리를 세워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노력 말이다. 그 새로운 노동운리를 통하여 개인들이 장시간 노동현장에서 자유를 느끼게 하고 학생들이 학벌주의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장 근로자들은 가족 전체의 생활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려 기업과 노조의 지시에 맹목적인 상명하복의 충성을 바치고, 정규직 취업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는 지금 불안한 (insecure)한 상태에 처해 있다. 자유를 느낀다면 그것은 단지 가치박탈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냉소적이고 부정적 의미의 자유일 뿐이다.

한국인들은 이제 G-20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초대받아 세계적 지도력에 동참하면서 어떤 가치지향을 가질 것인가? 물질적 가난을 벗어난 것도 경이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가난을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세계 앞에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